

전남도 농수협 중앙회, 광주시 AI 기관 유치 사활

시·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나주 혁신도시 우선 유치 대원칙 공감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 법 개정 추진·정부 ‘답다운’ 결단 촉구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추진되면 ‘공동 혁신도시(나주) 우선 배치’라는 대원칙에 공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자도생’을 멈추고 이전 대상기관을 공동혁신도시로 유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되, 지역 산업특성에 맞춘 ‘핀셋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원칙적인 대응을 유지하되, 만약 정부가 제2의 혁신도시 지정이나 개별 입지 이전을 추진할 경우를 대비한 양동작전으로 풀이된다.

특히 광주시는 AI(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완성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유치까지 연계하는 입체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전남도, “농·수협 중앙회는 반드시 유치”=전남도의 유치 1순위 타깃은 명확하다. 바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다. 전남은 전국 최대의 경지 면적과 농업 생산량을 보유한 대한민국 제1의 농도이자, 전국 수협 조합의 20% 이상이 소재한 수산물의 보고다.

전남도는 “농어업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컨트를 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들 기관의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농어업 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임을 설득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1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농·수협 중앙회의 전남 이전을 공식 건의하며 배수진을 쳤다.

다만, 현행 농협법과 수협법이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고도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등 이미 나주에 안착한 농생명 공공기관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며 정부의 ‘답다운’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해상풍력 등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기후·에너지 관련 기관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광주, “AI 중심도시엔 AI 기관이 필수”=광주시는 ‘인공지능(AI) 대표 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AI 및 데이터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광주시는 이미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관련 인프라(하드웨어)를 갖춘 만큼, 이를 운영하고 산업을 진흥할 공공기관(소프트웨어)이 결합되어야만 진정한 산업 생태계가 완성된다고 보고 있다.

광주가 눈독을 들이는 대표적인 기관은 AI관련 정부 기관이다. 아직 구체화된 기관은 없지만 AI관련 정부 핵심 기관 광주의 AI 클러스터와 결합할 경우 폭발적인 시너지가 예상된다라는 점에 서다.

광주의 ‘플랜 B’는 탄탄한 AI 기업군 광주시는 정부가 혁신도시법의 원칙(혁신도시로의 이전)을 깨고 구도심이나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허용하는 시나리오에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다.

이 경우 광주시의 필수 카드는 바로 ‘민간이 선택한 도시’라는 점이다. 공공기관이 억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민간 AI 기업들이 이미 광주에 터를 잡고 있으니 지원 기관이 따라와야 한다는 ‘수요 견인형’ 논리다.

◇원칙은 ‘함께’, 전략은 ‘치밀하게’=광주와 전남은 ‘나주 공동 혁신도시 우선 배치’라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이는 혁신도시법에 명시된 사항이자, 1차 이전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의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어 상황에서 마냥 원칙만 고집할 수는 없다는 현실론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양 시·도는 4자 협의체를 통해 유치 대상 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 조율을 마쳤다. 전남은 농생명·환경·해양 분야에, 광주는 AI·데이터와 문화·복지 분야에 집중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것이다.

불필요한 내부 경쟁을 없애고, 정부를 향해 “광주·전남은 준비된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이 양 시·도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 여야, 최고세율 30% 세제개편안 합의

기재위 예산 부수 법안 11건 의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말에 “당초 정부안에서는 2448억원 정도였는데, 수정안에서는 3700억~4000억원 정도(세수)가 줄어들어 약 1300억원 정도가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이밖에 전체회의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에 대해 5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별소비세법,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체육 학원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 매각”을 추가한 국제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국제기분법, 농어촌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편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 등 기타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전체회의 직후 “국민의힘 기재위원 일동”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세 전구간 인상안은 ‘폐업 조장법’이라며 “정부 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이 어려울 땐 대기업에 도와달라고 사정하더니 이제 와선 세금 인상으로 목을 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85조의 3에 따르면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은 이날(11월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해병대원 특검 ‘수사 외압’ 윤석열 등 33명 기소…150일 대장정 마침표

임성근 전 사단장 유일 구속 기소

이종섭·조태용 등도 재판에 넘겨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파헤쳐온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를 공식 종료했다.

이는 동시기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중 첫 수사 종결이다.

이명현 특검은 28일 최종 브리핑에서 “역올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과정에서 권력 앞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혀냈다”며 “성역 없는 수사로 실제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그동안 185회의 압수수색과 300여 명 소환 조사, 430건 이상의 포렌식을 진행했다.

수사 결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사 외압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해 두 차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 핵심 관계자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1호 기소’ 대상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5명을 지목했다. 임 전 사단장은 무리한 작전 지시로 사고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으며, 특검이 구속 상대로 기소한 유일한 피의자다.

또 박정훈 대령(전 수사단장)에게 보복성 영장을 청구해 감금한 군검사 2명과, 국회 위증 혐의가 있는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등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1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 전 장관 도피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이 기소됐다. 특검은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단행한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 방해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하거나 위증 혐의 고발을 묵살한 혐의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및 오동운 공수처장 등 전현직 간부 5명이 기소됐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인 이종호 전 블랙필인베스트 대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한편, 특검은 경복경찰청 관계자들의 수사 정보 누설 의혹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직권남용 혐의 등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이 특검은 “피고인들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신탁
신탁
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